

전남 17개 시·군, 지방세로 공무원 급여도 못 준다

2024 국감

정춘생 의원, 행안부 국감 자료
도 재정자립도 24.4% '최하위'
해남·보성·완도 등 '하위 10위권'
"교부세 삭감, 지자체 재정난 가중"



당하는 17개 시·군의 경우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자체 지방세로는 공무원들의 인건비조차 지급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교부세 삭감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는 전남도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지역 22개 시·군 중 77%에 해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비례대표·사진) 의원이 공개한 행정안전부 국감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남도 재정자립도는 24.4%로, 23.5%를 기록한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낮은 재정자립도를 기록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재정력으로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이 수치가 낮을수록 자체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지방소멸에 대한 위험도 커진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전남지역 22개 시·군 가운데 고흥이 7.1%, 함평 7.16%, 완도 7.24%, 보성 7.6%, 해남 7.8% 등으로, 이들 5개 군의 경우 전국 하위 10위권에 든 것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도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난을 가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여수·순천·광양·나주·목포 등 시 단위를 제외한 17개 시·군의 경우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자체 지방세로 인건비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지방소멸 우려도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

광주지역에서는 5개 자치구 중 동구와 북구 등 2곳이 지방세 수입 인건비 미해결 자치단체에 속했다.

정춘생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56조원의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 18조 2000억원을 삭감해 지자체들의 재정난을 부추겼다"며 "정부는 국가의 부담을 지자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지방자

치법 137조 2항까지 위반하는 등 오히려 지역소멸을 앞당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교부세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면 지자체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중앙의존적인 지방재정을 탈피하기 위해 '지역 살리기 5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올해 세수 결손으로 인한 전남도의 교부세 삭감 규모는 5299억원으로, 6797억원을 기록한 경북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오지현 기자 jinyun.oh@jnilbo.com

'전방·일신방직터 상가비율 10%로 하향' 재논의

광주시, 10일 도시계획심의위 개최
개발사 "15%는 상가 공실률 우려"

'광주 옛 전방·일신방직터 주상복합건물 상가 면적 비율 축소' 재심의가 오는 10일 열린다.

해당 사안은 개발사측에서 15%로 예정된 상가비율을 10%로 완화해 달라는 것이고, 시민단체는 특혜라고 반발하는 것으로 양측의 입장이 첨예한 상황에서 광주시가 이번 심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7일 광주시와 옛 전방·일신방직터 개발사인 챔피언스시티복합개발에이엠씨,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한차례 보류됐던 '옛 전방·일신방직터 주상복합건물 상가 면적 비율 축소'에 대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계위)가 10일 다시 열린다.

도계위는 지난달 26일 주거 외 비율을 15%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기부채납계획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의결했다.

개발사는 재심의에 앞서 공업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한데 따른 공공기여금 6000억원과 상가 의무 비율 완화로 절감할 수 있는 건축 비용 중 160억원을 도로 건설로 기부채납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개발지 부근의 교량 건설과 인프라

구축 등을 추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사 측은 "광주지역 상가공실률이 30%대인 점을 감안하면 15%로 했을 경우 공실이 예상되고 PF대출, 금융이자, 공공기여금 등 가중된 비용은 4300가구의 아파트 분양가에 더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시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에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상가용적 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개발이 늦어져 하루 이자가 2억원 가까이 나가고 있으며 본 설계조차 하지 못해 당초 내년 4월 예정했던 분양도 같은해 7월 이후로 미뤄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시민단체는 "조례를 통해 15%로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전방·일신방직부지만 10%를 적용하는 것은 특혜"라며 "광주시는 개발사의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조례 개정 등을 우선한 뒤 개발계획을 승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으며 도계위도 최선의 방안을 찾아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 시설의 주거 외 용도 의무비율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광주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를 입법예고했다.

노병하 기자



10·16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 토론회가 7일 광주MBC에서 열려 후보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 진보당 이석하 후보. 나건호 기자

광주시, 차기 시금고에 광주은행 선정

2금고는 농협은행

광주시는 차기(2025-2028년) 시금고 선정을 위해 7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1금고에 광주은행, 2금고에 농협은행을 각각 선정했다.

금고선정심의위원회는 이날 광주시의

평가 결과, 1금고는 광주은행, 2금고는 농협은행이 1순위를 기록했다.

이번 금고지정 방식은 1·2금고를 별도 지정하는 분리공모 방식으로, 1개 금융기관이 1, 2금고에 각각 참여 가능했으며, 1금고에 광주·국민은행이, 2금고에 국민·농협·우리·중소기업은행이 참여했다.

시는 내부 행정절차를 거쳐 10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공고하고, 11월 중 시금고 운영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노병하 기자

곁성군

전남 곁성 곁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3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 지원 프로젝트

곁성군에는 유기동물 보호소가 단 1곳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곳의 환경은 너무 열악하죠

마음만은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시설을 갖추고 싶었지만, 유실 및 유기동물의 지속적인 증가와 부족한 예산으로 보호소 운영에 한계를 느낀 곁성군은 최소한의 청결과 위생조건을 갖추어 유기견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건강하게 입양될 수 있도록 곁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모금을 통해 기존 시설을 보완하고 안락사 비율 감소를 위한 신규보호소 설립과 체계적인 입양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기부금 사용처

1. 기존보호소 확장 및 시설개선
2. 재입양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행복하기
지켜줄기

고향e음 전남 곁성군에 기부해 주세요

<https://ilovegohyang.go.kr>